

## 노무현 정권의 대언론 공격

노무현 정권은 공식출범 하자마자 ‘홍보업무 운영방안’ ‘기자실 폐지’ ‘신문고시 개정안’ 등을 쏟아내 언론들과 갈등을 빚었다.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는 과거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들과 언론관련 단체들은 취재봉쇄와 다를 바 없는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노정권 비판기사에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취재협조 거부로 맞서는 등 언론과의 갈등은 끊임이 없었다.

노무현 정권과 언론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마찰을 냈다. 소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2002년 5월 13일 ‘조선일보 50만부 절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며 특정언론들을 ‘조폭언론’이라고 표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편협은 매 사안마다 언론자유를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대응했다.

### 1) 노사모의 절독운동

노사모 명계남 대표는 2002년 5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노사모의 핵심 사업은 조폭언론 개혁운동이 될 것”이라며 “1차적으로 조선일보 50만부 절독운동을 벌

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 대표는 “절독운동은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모든 언론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조선일보는 언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빼고 하겠다”며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명 대표는 “언론은 국민들의 모든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폭력적으로 필봉을 사용하는, 의도적인 무력을 휘두르는 것이 조폭언론”이라고 주장했다.

편협은 다음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기사와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조폭언론’으로 매도하다 못해 ‘절독운동’ 운운하고 있으니,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특정신문을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그 독자를 적대시하는 것과 같으며, 그런 방식으로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대선활동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민주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노사모’ 측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 기자실 폐지 및 홍보업무 운영방안 논란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14일 이창동문화부장관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기자실을 폐지하고 공개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의 정부 부처 취재방식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출입기자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 언론사(기자)는 누구나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실’의 도입은 기득권을 확보한 언론매체의 배타적 정보독점 등으로 인한 독과점적 여론지배와 정보왜곡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브리핑 내용은 부실하고, 취재접근이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불만이었다. 또 정부가 공급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

적이었다.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하고 실명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언론계는 취재봉쇄라며 반발했다.

편협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3월 17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으로 언론의 정보수요를 제약하는 것은 정보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여론을 굴절시킬 위험이 있으며, 언론에게 알릴 것만 알리겠다는 편의적 발상은 폐쇄적인 밀실행정과 외눈행정을 조장하고 권력의 일탈 및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3월 28일에는 기사실 폐지, 브리핑제 실시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내놓을 경우 언론 고유의 감시기능은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보수요자인 국민의 균형 잡힌 국정 판단을 저해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신문고시 개정안 반대

정부는 신문고시를 개정해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에 편협은 한국신문협회와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3년 4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신문고시 11조 '공정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내용중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신문사의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편협은 신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편협은 규개위의 심사가 있기 하루 전인 4월 29일 공정위의 신문고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가 신문시장에 개입해 직접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협은 또 "이번 개정안대로 하면 정부는 신문시장에 마음대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 4)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 논란

국정홍보처는 2005년 8월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유사한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비판언론에 대한 기고나 인터뷰를 기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실제 조선일보에 기고한 당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기고문 작성 경위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오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부처 혁신 평가를 함에 따라 정부부처 기관들의 언론중재신청이 폭주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정병국 김충환 의원은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이었던 중재신청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모두 6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중 조선이 63회, 동아가 61회, 문화가 43회에 이르러 ‘비판 언론 옥죄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편협은 2005년 11월 16일 공직자들의 기고 인터뷰 제한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만든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은 정권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가 공직자들의 입과 손을 묶어 두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일 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시절을 연상시키는 반언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5) 청와대 비서실 취재거부

청와대는 2006년 7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으로 비유한 기사를 실은 조선일

보와 참여정부를 '악탈 정부' 로 규정한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거부를 선언했다. 청와대가 문제삼은 기사는 '계륵대통령' 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1면 정치분석 기사와, '세금내기 아까운 악탈정부' 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선일보는 국가 원수를 음식에 비유했고,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악탈 정부' 로 명명했다"며 "해설이나 칼럼 형식만 띠고 있을 뿐 '침뺨기' 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기사 곳곳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다"며 "언론이 마약처럼 강렬한 자극, 짜릿한 자기쾌감, 무절제한 전염성을 쫓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상황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두 신문의 취재협조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취재거부는 청와대 전 직원이 전화취재 응대와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취재거부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었다. 청와대는 2003년 9월 동아일보가 영부인 권양숙씨의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홍보수석실만 취재를 거부했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취재거부에 대해 '언론 증오는 이 정권의 청와대병' 이라는 사실을 통해 청와대의 비판을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 21 월간중앙 기사도 대통령을 가리켜 '계륵같은 존재' 라고 했는데도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국가원수를 먹는 음식에 비유했다' 며 시비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는 청와대의 취재거부' 라는 제목의 사실을 통해 "보기 싫은 신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가 취재거부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0월 2일 취재거부를 해제했다. 충분한 메시지도 던졌고, 청와대출입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푸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었다.